

데스크시각



박진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여수 밤바다 이 조명이 담긴 아름다운 예기가 있어/ 네게 들려주고파 전할 걸 어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지난 2012년 그룹 ‘버스커 버스커’가 부른 ‘여수 밤바다’의 노랫말 일부다. 그해 상반기 최대 히트 곡으로 떠올랐던 이 노래는 여수를 전국에 알리는 국민가요가 됐다. ‘여수밤바다’의 서정적인 선율에 꼭 빠진 이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를 불렀고, 그들 중 일부는 아예 밤바다를 ‘직관’하기 위해 여수를 찾았다. 그리고 지난 2018년, 로맨틱한 그곳 도시 야경에 심취한 관광객이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여수는 일약 유명 관광도시로 떠올랐다.

브랜드가 된 ‘여수 밤바다’

그렇다고 ‘여수 밤바다’만이 지금의 관광도시 여수를 만든 일등공신이란 의미는 아니다.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확충된 교통 인프라와 KTX 개통으로 접근성이 높아진 데다, 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콘텐츠가 어우러

잠들지 않는 도시, 광주

져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사실을 빼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여수의 아름다운 밤을 전면에 내세운 콘셉트(concept)는 ‘신의 한 수’였다. 돌산대학교에서 오동도로 이어지는 해안선에 오색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유럽 선과 해상케이블카를 운행하면서 여수 밤바다는 관광객들을 빨아들였다. 여기에 여수 밤바다를 거닐며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음악과 공연, 먹거리가 유혹하는 낭만파차와 낭만 버스킹까지, 그 모든 게 관광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했다. 아닌 게 아니라 낭만파차, 해상케이블카, 여수밤바다 및 낭만버스킹은 지난달 초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야간관광 100선’에 뽑히는 쾌거를 이뤘다. 그것도 하나뿐이 아닌 세 개가 동시에 뽑혔으니 말이다.

그렇긴 하지만 아직까지 야간관광의 최고 강자는 서울이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여수나 부산과 달리 삭막한 도시임에도 빼어난 건축물과 특색 있는 볼거리로 ‘서울의 밤’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다. 이번 야간관광 100선에도 23 곳이나 선정됐을 정도다.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 ‘안 보면 후회’라며 누군가 보내준 유튜브 동영상(‘Seoulites’: 서울의 장소)을 접한 후 서울의 저력에 놀란 적이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사진작가가 3년간 공들여 만든 3분 30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송례문, 경복궁, 올림픽공원, 서울역, 한강 등 대표적인 명소들의 야경이 담겨 있었다. 특히 타임 랩스 기법으로

찍은 영상은 국악 퓨전밴드의 경쾌한 음와 ‘쥐불놀이’와 어우러져 감흥을 더했다. 착착한 아파트 공사 현장이나 감추고 싶은 달동네의 ‘민낯’도 별이 내리는 마을로 변신했다. 도시의 치부까지 완벽하게 가려 주는 밤의 마법에 매료된 뷰어들은 ‘환상적이다’ ‘서울로 여행가고 싶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야간관광이 대세라는데

이처럼 야간관광은 여행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힐링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다. 근래 국내외 도시들이 저마다 건축물, 페스티벌, 미술관, 공연장, 전통시장, 산업유산 등을 엮어 밤 시간대의 볼거리로 내놓고 있는 건 그 때문이다. 서울시의 ‘밤도깨비 야시장’, 빛과 음악 및 기술이 어우러진 호주의 야간축제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베를린의 미술관들을 하룻밤에 둘러보는 ‘미술관 야행’(Long Nights of the Museums), 그리고 뉴욕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투어 등은 고부가 수익을 올리는 관광 브랜드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특히 뉴욕의 경우 지난해 야간관광에서 190억 달러(약 23조30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거뒀는데 전남 부서인 ‘야간 라이프 사무소’(Office of Nightlives)의 전문성과 마케팅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빛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는 어떤가. 유감스럽게도 전통적인 관광 인프라가 취약한 데다 도시의 야경이나 밤 시간대의 콘텐츠 개발에도 소

홀하다. 특히 ‘빛의 숲’을 콘셉트로 제시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나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와 같은 독보적인 자원을 활용하지 못해 야간관광의 모멘텀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빼어난 점은 광주의 밤을 각인시키는 브랜드 공연이나 상설 볼거리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는 앞으로 야간관광의 메카가 될 잠재력이 큰 도시다. 우선 ACC를 필두로 금남로 일대에 조성되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대인 예술야시장,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월봉서원 등 숨겨진 보석들이 많다. 또한 광주 동구를 중심으로 옛 도청 앞 5·18 민주광장을 주·야간 도시관광의 허브로 바꾸는 ‘광주문화광장’(Arts Square)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반가운 일이다. 게다가 오는 7월이면 문화 광주의 미래를 열어 갈 광주관광재단도 설립된다. 이들 구슬들을 잘만 꿰어 낸다면 얼마든지 문화수도에 걸맞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야간 관광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민·관의 전략적 협력이 있어야 함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물론 여행의 트렌드도 바꾸어 놓았다.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포스트 코로나’의 신성장동력으로 야간관광을 추켜든 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도시와 일상의 소소함을 새롭게 즐기는 방식, 야간관광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 아닐까. /jhpark@kwangju.co.kr

社說

부서 간에도 ‘엇박자’ 광주시의 어설픈 행정

오는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지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 해당 부서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원 내에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가에서 볼거렸다. 한쪽 부서에선 고분양가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데 비해, 또 다른 부서에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해 서로 엇박자를 낸 것이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사업 계획을 승인했는데, 분양가는 34평형 기준 평당 1500만 원대, 40~50평형대는 평당 2046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광주 아파트 분양 시세를 고려하면 ‘초고가’로 평가된다. 담당 부서인 광주시 공원녹지과 측은 시민에게 90%가 넘는 공원을 되돌려 주는 점을 들어 ‘초고가 분양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광주시 건축주택과는 투기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건의했고 결국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고

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1년이 넘으면 인근 아파트 시세의 10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한다. 이 기준을 중앙공원 1지구에 적용하면 평당 최대 1500만 원대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한쪽에선 2000만 원대를 보장해야 한다는데 또 한쪽에선 1500만 원대로 묶으려 하는 것이니 부서끼리 손발이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도시재생국은 다른 국과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고 공원녹지과를 포함하고 있는 환경생태국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 만인 지난해 8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00만 원대 분양가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시는 최근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뒤늦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한해 고분양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결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 소문 부족의 어설픈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립 유치원들 ‘예산 빼먹기’ 여전하다니

유치원 예산으로 건강식품 등 원장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원비를 실제 징수한 금액보다 적게 교육청에 보고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 내는 등 광주 지역 사립 유치원의 위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사립 유치원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다섯 개 유치원에서 각종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C유치원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유치원 예산으로 원장 개인의 건강식품(12건)과 생식(2건), 음료(23건) 등 모두 786만 원 어치의 개인 물품을 사들였다. B유치원은 2016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원장이 사적으로 사용한 식사비, 물품 구입비 등 209만 원(28건)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 원비를 전년도보다 인하 또는 동결하거나 1.3% 내에서 인상하면 학급 수 등을 고려해 학급 운영비를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M유치원은 2016학년도와 2018학년도에 원비를 실제 징수한 금액보다 적게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급 운영비 207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H유치원은 2018학년도에 같은 방식으로 학급 운영비 2400만 원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이 이번에 적발한 사립 유치원들의 위법 행위는 대부분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그 이후에도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감사와 엄중한 조처가 있어야겠다. 더불어 사립 유치원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 회계비 등 209만 원(28건)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하거나 1.3% 내에서 인상하면 학급 수 등을 고려해 학급 운영비를 지급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M유치원은 2016학년도와 2018학년도에 원비를 실제 징수한 금액보다 적게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급 운영비 207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고, H유치원은 2018학년도에 같은 방식으로 학급 운영비 2400만 원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이 이번에 적발한 사립 유치원들의 위법 행위는 대부분 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1월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그 이후에도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감사와 엄중한 조처가 있어야겠다. 더불어 사립 유치원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 회계비 등 209만 원(28건)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폐칼럼

오월 정신과 사회적 경제 타운

시각 수 있는 구조적인 큰 판의 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것으로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공동체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활동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계기가 필요하다. 최근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경제’의 모델을 접목시키면 좋겠다.

우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사업장들이 각 자치구 별로 함께 모여서 벤처 타운처럼 ‘사회적 경제 타운’을 이루어 시너지 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 사회적 기업들은 열악한 사업장 환경 탓에 많은 부담을 가진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타운’을 만들고 이곳에서 공동 구내식당, 공동 판매장, 공동 강당, 회의실, 공동 카페, 교육실, 자문실 등을 함께 공유하며 경영을 효율화시키고, 공동의 홍보 효과를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 종사자들의 자부심도 이러한 타운이 생기면 훨씬 높아진다. 사회적 기업들은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금 용도로 대출도 해주기 때문에 함께 모여 있는 좋은 사무실 조건이라면 부담을 적게 가지며 사무실을 임대 분양해 사업

을 펼칠 수도 있다. 각 구별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과 경영 컨설팅, 노무·회계 사무소등도 이 타운에 함께 위치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각 기업들의 고객과 회원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각각의 사업에 탄력을 불어게 된다. 강당에선 돌아가면서 각 회사들의 행사가 열리고, 자연스럽게 각 사업체들은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함께 노출되고 홍보된다. 각 사업체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키워 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 전국적인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경남 창원과 전북 군산은 물론 광주도 응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광주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컨셉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정신 세계에 깊이 흐르고 있는 절대 공동체를 만들어 냈던 나눔과 사랑의 광주의 ‘오월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오월 정신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끌어 낼 때 전국이 감동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벤처마케팅 사례로 ‘광주 공유경제 연구회’에서는 미국 유타주에 있는

‘Welfare Square’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농장에서 농사를 지어 먹을거리를 나누고, 재활용 용품과 리퍼브 상품들을 기부 쿠폰을 통해 공유 판매하며, 장애인과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들이 집적돼 거대한 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이 모델을 광주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

특히 필자는 사회적 경제 타운 건설에 광주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간곡히 바란다. 도시공사가 선도적으로 부지와 건물을 마련해 정부의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공모에 응모하고, 사업을 떠내 내부 시설과 운영비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게 임대 분양을 한다면 좋은 위치 좋은 시설로 경쟁력 있는 타운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한 자치구부터 먼저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모든 자치구로 확산해 나간다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정부의 공모 사업이 공간과 건물을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고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재평가돼야 한다

지역 불균형은 대한민국 미래에 재를 뿌려 왔다. 대한민국 지역 불균형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서, 문재인 정부도 이의 해결을 핵심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굳이 대선 공약과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역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 절대 당면 과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당위성에 대해 온 국민들에게 구구절절하게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표를 호소했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 3주년이거나 지난 현 시점까지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논의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펴고 있다. 정권 초기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호남권 기업들을 철저히 배제시키더니,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조 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인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을 광주에 짓 버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정 행위를 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령인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은 연구개발 소의지역을 정부가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충청권과 수도권에 모든 국가 시설을 몰아줬다. 심지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조차 수도권과 충청권에만 집중되다 보니,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과 같은 법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하지만 이 법 조항조차 지난 정부에서 신설된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수도권과 충청권에만 국가 시설을 몰아준 것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의식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이 법 조항이 신설되었을 것이다.

대선 및 총선과 같은 선거 공약은 숫자고 하는 농담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엄중한 약속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나주 유치를 당 대표가 공약까지 했

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자마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공약과는 정반대로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을 광주로 결정함으로써 국가 불균형을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행위는 자신의 대선 및 총선 공약과는 정반대로 정반대로는 행위로, 국민을 우롱하는 비도덕적인 행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선정 과정에서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이 광주에 유치되도록 하기 위해, 수도권 접근성이라는 평가 지표를 만들었다. 이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법하게 ‘차세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므로, 이 사업 평가 결과는 당연히 원천 무효가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평가를 다시 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일 것이다.



홍성출  
전북대학교 의대 교수

평등은 모든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이 기본 헌법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들조차도 평등을 그 국가의 틀이 되는 기본 헌법 개념으로 채택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헌법 11조 1항에서 평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구상 모든 현대 국가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서조차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평등권을 그동안 철저히 무시해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면이 국토의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이러한

無等鼓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어느덧 40일이 지났다. 국회는 새 주인을 맞느라 분주하고, 각 정당도 원 구성 협상과 상임위 구성을 위해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야권 일부 정치인과 극우 보수 측에서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선거 조작’이라는 망상(妄想)에 빠져 있다.

망상은 논리적 불합리나 모순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믿음이나 지각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사고의 이상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의 ‘선거 조작’ 주장은 망상으로밖에

망상(妄想)

에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망상의 대열에는 보수 야당인 통합당이 총선에서 대참패를 당해서인지 일부 극우 유튜브 채널까지 가세하면서 좀처럼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연일 새로운 선거 조작 증거라고 황당할 주장을 내놓고 있는 민 의원의 망상에 대해 같은 당 의원들도 진저리를 치는 듯하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기승전결이 전혀 안 맞는 음모론’이라고까지 비판했고, 당 지도부도 투표 조작 주장은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다. 통계청장 출신의 같은 당 유경준 당선인도 민 의원이 선거 조작의 근거로 인용한 월터 미베인 교수의 이포렌식 분석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민 의원은 자신을 비판하는 같은 당 동료들까지 ‘좌파’라고 몰아세우면서 여전히 선거 조작 망상에서 빠져 있다. 앞서 일부 극우 보수 지지층은 미국 백악관 계산관에 대한민국 선거 조작 의혹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청원까지 올리

면서 나라 망신을 시키기도 했다. 선거 조작 망상은 대한민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폄하하는 행위다. 코로나19 속에 더욱 빛을 발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선진 선거 행정 등을 강리코 무시한 것이다. 선거에서 지면 억울한 게 인지상정이긴 하다. 하지만 공신력 있는 정치인이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양 믿거나, 이치에 맞지 않게 허황된 생각을 하면서 선동까지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선거 조작을 주장하는 이들이 하루 빨리 망상에서 벗어나 이성을 찾았으면 한다. /최원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枚</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국문 신청 배달 안함))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